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6. 21.(목) / 총 4매
담당 부서	대중교통과	담 당 자	• 과장 김기대, 문기성 사무관 ☎ (044) 201-3823, 3832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TF	담 당 자	• 팀장 강욱, 이경수 사무관 ☎ (044) 201-4978, 4979
	교통안전복지과	담 당 자	• 과장 박정수, 오한영 사무관 ☎ (044) 201-3862, 3863
보 도 일 시		2018년 6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김현미 장관, "민선 7기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및 교통안전 강화 노력"

-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 운송수준 유지 등 현장 관리 철저, 교통안전 관리 강화 등 당부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2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내달 시행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른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관련>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각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중**이다.

* **노사정 합의 주요 내용**

- 노사정은 노선버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한다.
-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노사정은 상호 협의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 또한, 지난 6월 5일 각 지자체에 현 **운송수준 유지,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관리,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강화** 등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 이번 부단체장 회의는 **민선 7기의 출범**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연착륙**을 위한 **지자체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김현미 장관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노선버스의 현 운송수준 유지, 임금보전 등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운수종사자 채용 강화, 버스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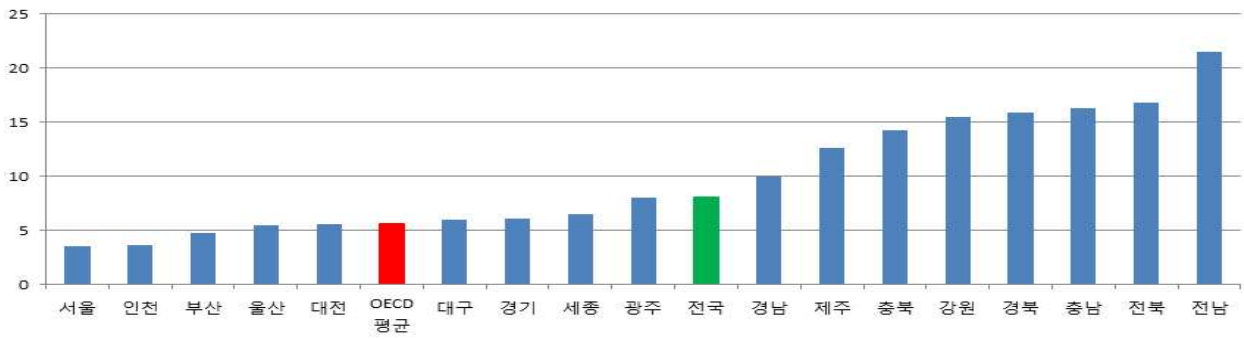
□ 김현미 장관은 "당장 7월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규모 노선감축 및 임금 감소**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그간의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지자체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 관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 "연말까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버스 운전자 근로조건 개선 및 버스 안전성 제고**에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참여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관련>

□ 한편, 김현미 장관은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73%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2017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OECD 평균은 '15년 기준

□ 김현미 장관은 특히, **보행자 및 고령자**의 사고율이 OECD에 비해 높은 만큼, 이에 집중하여 **지자체에서 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없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17년 고령 사망자 42.2%, 보행 사망자 40.0%(OECD는 각각 27.0%, 19.2%, '15년 기준)

○ 또한, 앞으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자체별 교통안전 개선사항 및 이행실적을 상세히 공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 김현미 장관은 "교통안전의 **핵심 주체는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통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다양한 홍보 콘텐츠 공유와 같이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문기성 사무관(☎ 044-201-3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구분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1만대당 발생건수	사망자수	10만명당 사망자수	1만대당 사망자수
전국	216,335	420.5	85.9	4,185	8.1	1.7
서울	38,625	395.1	107.0	343	3.5	1.0
부산	11,753	342.8	79.4	164	4.8	1.1
대구	12,970	526.1	99.7	148	6.0	1.1
인천	7,719	264.1	48.2	105	3.6	0.7
광주	7,499	499.6	107.0	120	8.0	1.7
대전	7,767	507.2	110.2	86	5.6	1.2
울산	4,265	365.9	68.3	64	5.5	1.0
세종	746	270.7	52.2	18	6.5	1.3
경기	50,627	395.2	86.6	784	6.1	1.3
강원	8,316	546.8	99.5	236	15.5	2.8
충북	9,273	577.7	102.5	230	14.3	2.5
충남	9,241	430.3	75.3	351	16.3	2.9
전북	7,748	423.5	75.6	307	16.8	3.0
전남	9,770	544.0	85.2	387	21.5	3.4
경북	13,896	518.3	85.4	425	15.9	2.6
경남	11,742	350.0	62.6	337	10.0	1.8
제주	4,378	690.4	81.1	80	12.6	1.5